

'증시 부양' 구경만 하는 국힘과 2030 표심

에스프레소



이동수

세태정치연구소 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시 부양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24년 가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마에 오르면서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 유예된 금투세는 원래 2025년 시행 예정이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소득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당시 한국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금투세 시행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온라인 2030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불러야 한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이 때문에 놀란 민주당은 2024년 9월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 간 토론에 “역할극이나”는 야유도 나왔지만, 중요한 건 이 찬반 논쟁을 모두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산 이동을 유도하며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갔다. 오늘날 부동산 양극화에 원죄가 있는 민주당으로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세간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개인들의 투

자 심리를 부동산이 아닌 증권시장으로 돌리는 건 필사적인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두 차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지난해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기성세대의 견고한 자산이라면, 주식은 청년 세대가 기릴 수 있는 희망에 가깝다. 부동산 가격은 부모 도움 없이 자력으로 매입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집값 폭등에 청년층은 국힘 지지 주시는 2030 자산 증식 사다리 정부가 증시 부양하면 표 잃는데 국힘, 금투세 논쟁에 왜 거리 두나

2024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중 30대 이하는 10.6%에 불과하다. 20대 이하와 30대 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은 각각 9.4%, 36%로 2023년보다 0.9%포인트, 0.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는 주택 소유율이 늘었다.

집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청년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체 자산에서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과거엔 예·적금이 대부분이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 자산 비율이 빠르게 늘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저축만으로는

‘벼락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불안감이 확산한 탓이다. 한국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층에서 주식·채권·펀드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팬데믹 전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집값은 너무 올랐고 가상 화폐는 해킹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은 청년층의 유일한 자산 증식 사다리로 자리매김 중이다. 2024년 새로 개설된 주식 계좌 절반이 2030 소유였다. 2025년 하반기엔 반도체 주식이 강세를 보이면서 청년층의 ‘빚투’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흑사라고 주가가 꺾여 민심이 돌아설까 노심조사하며 모든 수단을 쏟아붓고 있다. 코스닥 띄우겠다고 연금까지 끌어들이는 걸 보면 말이다.

신기하게도 증시 부양 논쟁은 여야가 아닌 여론 내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자는 쪽도 민주당(이소영·이언주 의원 등)이고, “부자 감세”라며 신중론을 펴는 쪽도 민주당(진성준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따금 정부 정책을 논평이나 낼 뿐,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인물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은 2030 세대의 이탈을 초래했다. 덕분에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지지라는, 전에 없던 반사이익을 누렸다. 지금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지만,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성공한다면 그 여파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社說

청문회도 파행 이혜훈, 지명 철회가 순리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19일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쏟아졌지만, 이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보좌진에게 한 갑질과 폭언부터 문제였다. 이 후보자가 남편과 함께 수도권 일대 상가와 땅을 사들여 3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가족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장남은 미국 유학 때 논문 공저자로 교수인 이 후보자 남편을 게재했다. 세 아들 취업·병역 혜택 의혹도 제기됐다. 청문회에서 불거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모든 의혹이 단순 추측 수준이 아니다. 다른 후보자였으면 이미 낙마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버텼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만으로 탕평 인사를 했다는 명분이 서고, 낙마하더라도 “보수 진영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고 하면 된다고 한다. 어떤 결과나 나오든 손해 볼 게 없다는 식이다.

국민의힘이 서울 서초 지역에서 이 후보자를 3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것도, 지금 나오는 각종 의혹도 대부분 국힘 시절 벌어진 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에 대해 불거진 모든 의혹은 이 정부가 밝혀온 국정 운영 방침과 배치된다. 만약 전 정권에서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주택 공급 대책보다 '세금 인상' 얘기 먼저 꺼낸 청와대

부동산 세금 인상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며 혼선을 주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주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양도소득세를) 달리 적용하지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사실상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뒤 민주당이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세금 인상’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의 주장은 이른바 ‘똥똥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양도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다. 그는 “10억, 50억, 100억원짜리 한 채도 있는데, 장기 보유하면 다 똑같이 (양도세를) 80%까지 공제해준다. 조세 형평에 맞는지 많은 논의가 있다”고 했다. 발언 내용으로 볼 때 단순히 시장 반응을 떠보려는 차원을 넘어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집값 급등은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다. 문제는 세금만 올려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투

기 억제’를 내세워 보유세·양도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부동산 안정보다는 ‘미친 집값’을 만들고 말았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세금 폭탄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9년 만에 최대 폭(9%)으로 상승했다. 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강남 집값이 하락한 것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 덕분이었다. 서초·강남구 일대에 보급형 리주택 1만5000호를 지은 데다, 과천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과천과 강남권 주택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공언하고 있지만 대책 발표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어서 대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금 할 일은 선부터 세금 인상 논란이 아니라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꺾을 수 있는 압도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금이라는 쉬운 칼날만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실패할 수 있다.

'서해 피살 은폐' 판결문에 드러난 국민의 목숨 값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1심 판결문은 당시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이 서해에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을 발견하고 사살한 뒤 불태워 소각까지 한 사실을 특수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국민에게 숨겼다. 언론 보도에 대한 ‘보안 조사’도 지시했다. 북의 만행을 알면서도 숨진 공무원을 찾는 거짓 시늉을 하며 대규모 수색 소강이 벌어졌다. 23일 ‘사건 파장 보고서’는 “공개 시 남북 관계 경색”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당시 파악했던 북한군 내부 교신은 “빨리 7.62마리(기관총으로) 사살하라고 한다”였다. 사살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당시 국정원은 “김정은이 지시한 게 아니라 현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군은 “지금 연유(취발유) 뿌리면서 (소각한다)”고 했다. 우리 군은 불빛도 확인했다. 하지만 북이 ‘사살은 했지만 태우지는 않았다’고 하자 시신을 찾는다면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우리 국민이 이미 사살, 소각된 것을 알고도 북한 지휘부에 책임을 돌리기 위해 하려고 국민을 속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았다. 근거는 ‘월북 언급을 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정도였다. 사라

진 구명조끼는 없다는 선원들 증언과 공무원이 ‘북한’을 검색하거나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수사 내용은 무시했다. 기진맥진한 공무원은 ‘살려주세요’라고 했지만 북한군은 “끌고 가는데 자꾸 (바다에) 잠긴다”고 교신했다. 극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 ‘월북’ 단어를 썼을 가능성도 무시했다.

판결문을 통해 합참이 애초에 “실종 예상 시간대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흘러 월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라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당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발표가 단정적’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단언할 수 있나”라고 했다. 사실상 질책한 것이다. 이후 해경정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월북이 맞다”고 밀어붙였다.

그런데도 사건 혐의자 5명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됐다. 상대가 북한이라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가 컸다. 피살된 공무원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썼다. 당시 대통령은 자고 있었고 다음 날에야 보고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국민의 생사 문제보다 ‘남북 관계’가 더 중요했다. 유족들은 “특검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 정권이 특검 아니고선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다.

우정아트 아트 스토리 [616]

청동에 새긴 미국의 옆얼굴

1905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취임 기념으로 제작한 특별 주화다. 미국 미술의 르네상스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조각가 오거스터스 세인트-고든스(Augustus Saint-Gaudens: 1848-1907)가 디자인하고 티파니앤코사(社)가 제작했다. 앞면에는 단호한 루스벨트의 옆얼굴을 새기고 그의 선거 슬로건 ‘만인을 위한 공정’을 라틴어로 적었다. 뒷면에는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가 대지를 강인하게 움켜쥐고 당당히 서 있고, 취임식이 열린 장소·날짜와 함께 미연방의 건국 이념이 담긴 ‘여럿이 모여 하나(E Pluribus Unum)’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은 기념주화는 초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여러 단체에서 만들었으나, 1901년 루스벨트의 전임자 맥킨리 대통령이 취임할 때 처음으로 조폐국에서 공식 주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조폐국에서는 주화의 예술성보다 효율적인 대량생산을 중시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미술을 사랑하던 루스벨트 눈에는 이들이 모두 ‘끔찍할 정도로 흉측하게’ 보였다. 그는 조각가에게 직접 고대 그리스 주화처럼 예술적인 새 주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고, 당시 암 투병 중이던 세인트-고든스는 품격 있는 디자인이 곧 국격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 주조를 티파니에서 하게 된 것도



오거스터스 세인트-고든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기념주화, 1905년. 청동, 지름 7.4cm.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미국미술관 소장.

입체감이 큰 예술적 디자인을 소화하기에 조폐국의 대량 생산 체계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7년 이래 미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로 변경됐다. 그러나 절제된 고전미를 바탕으로 엄격하고 위엄적이지만은 공화국의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 공식 디자인의 원칙은 세인트-고든스 이래로 변하지 않았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젊은층 달라지고 있다, 좌파 싫어한다

대한민국 운명, 102030 손에 달려 ... 압도적 차이로 국힘 지지

뉴데일리 newdaily.co.kr

102030는 한줄기 희망의 빛, 70+보다 월등 높아 자유대학·보스 등 자유 우파 청년 단체 수십 개 활약 기존 언론의 편파·편향, 이런 흐름 애써 무시·평혜

《자유대학》 박준영의 목숨 건 단식

1월 7일 한 젊은이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정 재판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탄핵정변 이후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을 깨닫고 2030 중심으로 결성된 자유 우파 단체 자유대학 대표 박준영 군(25, 연세대)이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촉구했다. 그는 살을 에는 추위 속에 단식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기도 했다. 퇴원 후 다시 단식을 이어가다 생명의 위협을 걱정한 많은 이들의 만류로 11일 단식을 중단했다.

박준영 군의 부모는 모두 **강성 골수 좌파 인사**. 아버지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장을 거쳐 **문재인** 정권에서 MBC 사장을 지낸 **박성제** 씨. 어머니는 좌파 운동권 출신으로 카카오 부사장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을 지낸 **정혜수** 씨. 그는 부모와 정치적·이념적으로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박준영 대표가 자유 우파 행동가의 길을 선택한 첫 계기는 조국 사태였다. 이어 탄핵 정변을 통해 좌편향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 지난해 2월 10일 대학 최초로 탄핵반대 연세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시국선언은 전국으로 확

(단위: %)	조국 후보	이탈어	국민	국정	문명당	개혁	그 외	지지	지지	가중값
	연수당	국민	국민	국민	국민	국민	국민	국민	국민	연수당
총 지지율	(506)	38.6	41.7	2.4	0.9	3.4	1.2	9.9	1.8	(1000)
남성	(506)	35.8	43.3	2.6	0.8	5.4	1.2	9.6	1.3	(495)
여성	(494)	41.3	40.1	2.2	1.1	1.5	1.2	10.3	2.3	(505)
연령대	(108)	25.6	49.4	2.7	0.0	7.4	1.9	10.2	2.8	(150)
18~29세	(124)	36.4	43.3	0.8	0.0	7.0	1.6	10.8	0.0	(149)
30대	(170)	47.3	32.4	1.3	1.7	1.8	2.4	11.9	1.2	(170)
40대	(224)	42.4	39.2	1.4	1.8	0.8	0.4	12.6	1.3	(194)
50대	(208)	41.0	39.2	4.5	0.5	2.9	0.5	9.3	2.1	(179)
60대	(166)	36.0	48.7	3.6	1.3	1.9	0.6	4.2	3.7	(188)
70대 이상	(196)	40.7	41.6	0.9	1.0	4.4	1.3	8.0	2.1	(185)
서울	(310)	35.2	40.4	2.2	0.3	4.3	1.1	14.8	1.8	(324)
인천/경기	(108)	41.8	38.0	5.9	0.0	1.3	1.6	10.0	1.4	(108)
대전/충청	(99)	17.9	64.7	2.3	0.0	3.2	3.4	7.7	0.8	(97)
대구/경북	(147)	27.9	54.1	1.5	3.7	2.6	0.6	7.2	2.4	(149)
부산/울산/경남	(103)	72.8	14.6	4.6	0.0	1.1	0.0	6.1	0.8	(96)

▲ 좌파운동권, 중도파이 정치인, 기회주의 언론의 집합이 현 집권세력이다. 이들 기득권의 주력은 4050, 60 초반에도 이들 영포티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의 위선을 향한 102030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기득권층의 일각 기존 언론은 애써 이들을 무시·평혜하고 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 여론조사결과보고서 중 해당 화면 갈무리

산, 서울대 등 40여 개 대학이 동참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자유대학》이 결성돼, 거리 집회·성명 발표·유튜브·청년정치 참여 독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보스》의 재치 만발 메시지

《자유대학》이 20대 중심이라면, 흥대입구나 영등포 등에서 아스팔트 집회를 주도하는 《보스》는 30대 직장인을 주축이다. 생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많아 야간 집회를 많이 한다. 20대 대학생 주도 《자유대학》에 비해 《자유안간대》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자유대학》과 함께 양대 청년 단체로 손꼽힌다. 재치 있는 피켓과 현수막으로 유명하다.

※ 이태원 추모 중, 무안공항 외면 중 ※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들 어서 오셈 ※ 미사일 날리는데 정은이는 내 친구? ※ 중국은 무섭고 국민은 안 무섭나? ※ 쿠광은 밤샘 급지, 날리는 새벽 배송 ※ 중국인 욕하면 징역? 여기 중국 입막?

“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은 지령에 따라 움직인 까짜 운동권. 자발적인 동기로 시작한 현 애국청년운동은 진짜 민주화 운동이고 진짜 운동권. 하루 이틀 끝날 싸움 아니다. 최소 20년 운동이 목표이다.”(박대군 대표, 38). 기성 신문·방송은 이런 기류를 외면하고 폄훼도 서슴지 않는다.

102030 단체들의 폭발적 출현

확실히 젊은층이 달라지고 있다. 10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우파의 정치적 무덤 / 중북 강성 좌파의 뒷발》인 호남권도 꿈틀거리다.

지난해 12월 《2025자유청년대회》에는 전국에서 《자유대학》 《보스》를 비롯 22개 단체 대표들이 모였다. 청년들 목소리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30 책임당원들은 지난 15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수사를 촉구했다.

4050 위선을 향한 102030의 분노

젊은이들이 좌파와 거리를 두는 추세는 뚜렷하다. 좌파는 4050. 반면 우파는 2030. 특히 1020는 압도적.

조원시엔애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월 7일 조사한 결과, 1020에서 국힘 지지는 49.4로 민주 지지 25.6보다 무려 23.8%p나 앞섰다. 70세 이상에서 국힘 48.7 민주 36.0으로 12.7%p 앞선 것과 대조를 이룬다. 30에서도 국힘 43.3, 민주 36.4. 젊은이들이 얼마나 좌파를 혐오하는지 보여준다.

마지막 희망의 보루 102030

김민전 국힘 의원은 지난해 말 SNS에 글을 올렸다. “2025년은 판도라 상자. 상자는 열렸고, 분노, 절망, 애달픔이 튀어나왔다. 상자의 마지막은 희망이라더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나서는 《102030》이 우리의 희망이다.”

정치권 사법부 언론계 곳곳에 저질·좌편향-기회주의 기성세대들이 진치고 앉은 암담한 현실. 그럼에도 《자유와 가치》에 눈뜨고 행동에 나선 젊은이들에게서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본다. 102030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 편집자 취입급턴 여론조사는 1월 7일 시행. 표본 1천, 무선ARS, 응답률 3%, 95% 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1월 18일 게재 되었습니다.

